



한·미FTA 서비스분야 방송 등 100개 개방제의 외국인투자 제외·제한업종에 해운교육업 새로 추가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분야에서 방송, 전력, 회계, 의료 등 100여 개 부문을 시장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제시했다.

한-미 양국은 FTA 2차 본협상 기간인 7월13일 상품분야의 개방을 5단계로 분류하는 개방원칙에 합의하고 서비스 분야 협상안을 교환했다. 양국은 농업, 섬유, 의약품 등 분야에서는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김중훈 한국 수석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양국이 현재 서비스 분야에서 개방 유보안을 교환했다"며 "우리측은 한-싱가포르 FTA의 81개 유보안보다 많은 수준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한국 측 유보안에는 △방송, 전력, 우편 등 공공 분야 △법률, 회계, 세무, 건축, 의료, 변리사, 약국 서비스 등의 전문분야 △운송, 도박 등 100여 개 분야가 포함됐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외국인투자 제외, 제한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신문, 잡지, 뉴스제공업(통신사), 교육, 공연예술업 등도 포함됐으며, 안경점업과 해운교육업 등도 새로 추가됐다.

미국은 핵발전연료업, 내항해운 등을 유보 대상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개방제의 업종별로 현행 법률상 외국인투자제한 조치 등을 밝히면 FTA에서도 이를 인정해 개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개방유보

안을 제시했다. 7월부터 절반으로 줄어든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도(스크린 쿼터)와 기본통신산업의 외국인 지분 제한(49%) 등도 포함됐다.

회계, 약국 서비스 등 60여건은 현행 규제 외에 추가적인 규제를 할 수 없는 '현재 유보'로, 방송, 전력 등 40여건은 현재보다 더 큰 규제를 할 수 있는 '미래 유보'로 구분돼 제시됐다.

또 상품분야에서 한-미 양국은 개방원칙(frame) 협상에서 관세철폐 이행기간을 즉시 철폐부터 3, 5, 10년으로 나누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개방 예외 품목 등 포함할 '기타(Undefined)' 항목을 추가해 개방대상을 5단계로 분류하기로 한 것이다.

양국은 각 품목을 어느 단계에 포함할지를 정한 품목별 시장개방계획(양허안)을 다음달 중 교환하기로 했다.

한국은 농업 분야에서 쌀, 보리,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등을 시장개방에서 제외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감축해 나가는 '기타' 품목으로 제시할 계획이지만 미국은 폭넓은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섬유협상에서는 한국이 5년 이내에 시장을 개방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이 수입품 급증 때 일시적으로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특별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의 도입을 요구하는 수세적 입장이다.